

# 상점가 빈 점포 활용 근거 마련

### 김철수 도의원, 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 발의 고객 편의시설·청년 창업보육 공간 마련될 듯

내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 농산림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

례안에는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



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조례에서 지원되는 상점가와 상권구역의 폭도 더욱 광범위해졌다.

기존의 '상점가'의 정의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업, 용역업포가 밀집하고 도소매 비중이 50% 이상해야 해 기존 음식점 위주의 골목상권이 상점가 지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

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 기존 상점가 규정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를 얻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에 있을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 시군 연계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발굴

### 성경찬 도의원, '복원·정비·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제377회 정례회에서 '전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지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두세훈 도의원, 민주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당사에서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지난달 9일자로 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연이어 30일자로 전북도당 법률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두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전북도의 인권공감버스 중북노선 대법원 패소 관련해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질타하면서 도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한, 두 의원은 재상고심에서 전북도의 대법원 승소에 기여하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두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 특보로 활동했고, 안주군 마을 변화사업 및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야당 비토권 무력화·재판 수사 실무 자격 삭제

###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공수처 검사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은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 2인이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야당 측에서

반대하면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다. 추천위는 4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중료를 결정했다. 비토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결국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여당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꾼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강행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배제하고서 당연직 추천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완화 조항이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경력만 있더라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안은 공수처 검사를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로 고쳤다. '재판수사 실무경력 5년' 자격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뉴시스

## "의무 이행 안하는 사립학교에 예산지원 부적절"

### 박용근 도의원, 예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8일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북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특정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 5천여만 원을 일절 내지 않았지만, 2021년 시설투자료 약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가는 재정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박용근 의원은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점검 등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심사 진행 중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8일 2021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만기 위원장(고창2)은 농업계 고교 교육지원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남생이 사육장 조성에 쓰인 것과 관련한 감사 등의 진행 상황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관련해 클럽 지도자의 인식개선, 리그 운영 개선방안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사립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국·공립, 사립기관도 차이가 없도록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혁신학교

운영이 10년을 경과한 이제는 혁신교육 모델을 만들어 일반 학교에 전파해야 한다"면서 전북도가 시작해 대통령 공약이 된 사업으로 혁신성과가 표준화가 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재 의원(전주4)은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중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개선비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교사, 학생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병원 선정 방법 등을 질의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이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실내누리놀이터 지정 사업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장애인교원 채용확대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907호